

도 출연기관을 경영성과 목표 설정

도, 전북연구원 등 12개 기관별 맞춤 경영목표 바탕 성과계약 체결 민선8기 도정 비전 달성 위해 협력 네트워크 구축 공동지표로 추가

전북도는 도 산하 출연기관의 경영성과 목표를 점검하고, 지난달 31일 기관별 맞춤 경영목표를 바탕으로 기관장과 경영목표 성과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이다. 전북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등 12개 출자·출연기관장이 기관별 경영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계약서에 서명했고, 공식인 전북개발공사, 신용보증재단, 자동차융합기술원, 군산의료원 등 4개 기관은 기관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성과계약 체결에 앞서 1월

8일부터 19일까지 2023년 출연기관장 경영성과 목표 설정 보고회를 개최했다. 도정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출연기관이 도정 핵심시책과 연계된 기능을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전북연구원을 비롯한 12개 출연기관의 2022년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2023년 핵심 목표에 대한 비전과 추진계획을 세웠다.

2023년 12개 출연기관장의 경영성과 목표 수는 총 143건으로 30건이 신규로 추가됐다. 이 중 '도·공기업 출연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포함한 성과지표 30건이 신규 추가됐다.

전북연구원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특례 100건을 발굴

하고 전북테크노파크는 138억원을 투입해 161건의 기업 기술예를 해소할 예정이다.

전북도경제진흥진흥원은 전북일자리센터를 통한 1,500명 취업연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농생명산업 수도 실현을 위한 농생명·그린바이오 사업 기획 9건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 밖에도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경력단절 여성 4070명의 취업지원,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은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대상의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1,350명 달성, 전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은 콘텐츠 기업 육성을 통한 신규 일자리 120개 창출을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전북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합

계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을 만들어 가기 위한 민선 8기 도정 비전을 달성하고자 '도·공기업 출연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전 기관 공통지표로 추가했다.

도는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해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의 연임 여부, 기관장 성과급 지급(0~120%)에 활용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끊임없는 경영개선을 유도한다.

노홍석 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북도 민경제 부흥, 농생명 산업 수도, 문화·체육·관광 산업 거점 조성 등 도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정의 한 축으로서 공기업·출연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북도와 산하 공공기관 간 긴밀한 소통 및 협업을 통해 모든 기관이 2023년의 경영목표와 더불어 도정목표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청년·신혼부부로 확대

이명연 도의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공공건설·매입 임대주택 전제로 지원대상 늘려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 10)이 지난해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도 청년주택 정책 부재를 지적한 데 이어 본격적인 제도정비에 나서고 있다.

이명연 의원은 오는 2일부터 열리는 제397회 임시회를 앞두고 기존 저소득계층에만 지원하던 임대보증금을 청년, 신혼부부로 확대하고, 지원주택대상도 장기임대주택에서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 전체로 대폭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제정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서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로 개정한다.

이 의원은 "매년 민생 이상의 청년들이 전북도를 떠난다. 청년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한 만큼 도 차원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정책을 통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고금리시대 주거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가운데 공공의 지원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기존 저소득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추가해 지원대상이 약 5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한다.

이 의원은 "도내 청년과 신혼부부가 우리지역에서 자립기반을 확보할 때까지 전북도의 다양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지원정책 발굴 및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북도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고 올 상반기부터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또는 거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구당 2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최대 6년까지 융자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4대 폭력 없는 선진의회 구현

전주시의회, 폭력예방 통합교육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 다짐

전주시의회는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4대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전북개발공사 강당에서 지난달 31일 열었다.

이날 이기동 이장 및 전주시의원 직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등 4개 법령에 따라 4대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기획됐다.

강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 강사인 마음채심리상담센터 흥미션 센터장이 맡아 4시간 동안 열정적인 강의를 펼쳤다.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직원들은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다짐했다.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은 "이번 교육이 우리 사회의 4대 폭력에 대한 이해와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전주시의회는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전북개발공사 강당에서 4대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가졌다.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 근거 마련

최형열 도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심의 '눈앞'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97회에 올해 첫 번째 법안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최 의원은 "본 조례안은 도내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효과적인 기업유치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 향상,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여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유치기업의 공장이나, 분사 또는 연구소를 낙후지역 안으로 이전·신설·증설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사후관리 조항을 제정해 유치기업의 고충 사항을 수시로 파악, 해결하는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최형열 의원은 "인구소멸의 근본 원인은 일자리 부족에 있는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낙후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인구를 유입하는 등 인구소멸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균형발전과 인구소멸 방지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인 지방자치법연구회가 6개월간 활동하고 연구한 결과물로 대표의원인 최형열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소속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김재훈 기자

공공기관 위탁 대행 사무 법적 근거 규정 마련

김대중 도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전북도의회가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입법절차상 하자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위탁 대행 사무의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번 2월 임시회를 앞두고 김대중 의원(익산,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위탁 대행 사무의 범위와 비용부담 방법 및 절차 등 관리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전북도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후 평가도 실시해 이를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전북도는 도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두고 추진해 왔다.



하지만 전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사무 위탁은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에 해당해 전북도가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 공공위탁을 할 경우 관련 근거 조항이 없어 위법 소지와 절차상 하자 문제가 있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자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제397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공포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되며, 올해 첫 추경 예산안부터 이번이 제정된 조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오늘, 매일, 그리고 미래의 가치

오늘, 지친 마음까지 밝혀주는 건 전기가 가진 하루의 가치입니다

매일매일, 소중한 일상을 지켜주는 건 전기가 전하는 365일의 가치입니다

100년 후에도, 하늘과 숲을 푸르게 하는 건 전기가 만들어갈 100년의 가치입니다

오늘, 매일, 그리고 미래까지 모두의 삶이 풍요롭도록 합리적 전기요금으로 국민과 함께 전기의 가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기본공급약관 개정사항 안내

('23.1.1 시행)

01 전기요금 조정
모든 소비자 11.4원/kWh 인상 (단, 농사용은 3년간 분할하여 매년 3.8원/kWh 인상)

02 기후환경요금 조정
기후환경비용 증가분을 반영하여 1.7원/kWh 인상 (7.3 ~ 9.0원/kWh)

03 취약계층 보호 ('23.1.1 ~ 12.31)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복지할인 고객 월평균 사용량 313kWh까지 요금 동결 (초과 사용량에 대해서는 인상 단가 적용)

04 제3자·직접PPA 고객용 전기요금 신설
재생에너지 거래 고객의 합리적·효율적 전력소비를 위한 전용요금제 신설